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 용역 착수

4차 산업혁명 연계 미래 유망 첨단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 실행프로젝트 도출 등

전북도는 12일, 전북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경제 환경 및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전북 지역산업의 단기 대응방안과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비전 전략 마련을 위해 '전북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산업연구원이 주관하여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전북산업의 종합적인 진단과 구조분석을 통해 산업 분야별 구조개편 방안과 육성 정책 등 우리도 산업경제 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산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용역의 추진배경은 최근 지역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전북 도내 제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주력산업 위기의 상황에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신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시행됐다.

주요과업 내용은 군산 등 전북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진단과 구조 분석, 산업구조 개편 당위성 및 구조변화와 전망, 지역산업발전 비전과 목표,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전략 제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발전 잠재력이 확보된 신산업 발굴 등 미래 유망 첨단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정책 실행 프로젝트 도출 등 전반적인 조사와 진단을 통해 지역성장동력산업의 구조재편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역산업 자원분석 및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부합성 확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주력·연고산업 등 대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년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과 매년 지역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역점적으로 육성해 오고있다.

이번 전북산업에 대한 거시 및 미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수립하는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에 정부의 산업정책방향 및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융복합 핵심기술과 연계한 대표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산업발전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최소화 할 산업으로 다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전라북도 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정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전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경제포럼 회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민주당 새 원내대표 후보군 '물망'

홍영표 · 노웅래 · 조정식 의원 등… 내달 11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내달 선출키로 하면서 '포스트 우원식' 자리를 놓고 후보군이 물밑에서 득표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단 당내에서는 조정식(4선) 의원과 홍영표·노웅래(3선)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홍 의원은 노동계 출신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일자리위원회 본부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실현에 기여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만큼 대표적 '친문'으로 분류된다.

비문계로 분류되는 노웅래, 조정식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노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는 MBC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4선 중진인 조 의원은 당내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2016년 원내대표 경선출마를 검토했으나 경선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우원식 원내대표 후임을 뽑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월11일께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어르신 · 학교 동행 정책 펼칠 것"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도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학생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에서 일석이조의 효용성이 있는 사업에, 어르신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 정책을 펼치겠다."고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전문성과 건강한 심신을 가진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르신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정책을 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전통놀이, 인성교육, 한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초등 돌봄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돌봄 노하우와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지자체와 노인회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강사는 물론, 학교도서관 도우미와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급식실 배식 도우미, 배움터 지킴이(학교보안관), 학교청소관리 등, 어르신들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학교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기자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발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을 골자로 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한이 그간의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직접 개발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처리가 간소화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지역 의지대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전주만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 심장터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당 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전주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15~16일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 선출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전국 시·도당 가운데 유독 전주만 가장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이처럼 일방통행식 경선방식은 현역 시장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선이어서 조기경선을 실시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을 위한 경선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당의 경선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김승수 현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뻔한데 그럴 경우 아무런 후보자 검증도 없이 현 시장에게로 당 후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후보자 검증권리는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예비후보는 "3~4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5월 선관위 후보 등록 전 경선을 통해 당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독도 관련 日 주장 수용 불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과 회담서

강경화 외교장관(사진)은 11일 고노 다로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에 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에서 "고노 대신은 위안부 합의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다"며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계획에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아가 이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항의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논의는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변경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대화 국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올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이어져 온 양국 간 소통의 일환"이라며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 및 소통을 통해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건설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문제 및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개헌안 토지공개념 법제처 의견 따라 '법률로써' 추가"

靑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 의미 명확히 하자는 차원"
자구수정 정도 경미해 알려지지 않았던 개헌안 변경 표현도 공개
나경원 "개헌안 도둑 수정… 토지공개념 급격히 확대하는 것"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졸속으로 추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고 따라서 3월22일 발표안 초안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하지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해당 조항은 개헌안 40조2항과 현행 헌법 37조2항 등에 따라서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주의적으로라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심사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37조2항(개헌안 40조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브리핑에 함께 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오늘 기사를 보니 (정식 개헌안에)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서 개헌안 조문 내용이 변경된 것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것은 브리핑한 바 있는데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표현변경은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법률로써' 문구도 그저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는 판단으로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다"며 "일부러 숨기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개헌안 초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식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헌안 제128조 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된데 대해 "청와대 개헌안이 아주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의도적이라 해석하면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률로써'라는 표현 외에도 자구수정 정도가 경미해 브리핑에서 알리지 않았던 개헌안의 변경된 표현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 3조2항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의 경우는 최종안에서 '首都(수도)'라는 한자 표기가 병기됐다. 13조3항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 할 때는'의 경우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하려 할 때는'이라고 변경됐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